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 전 부처 장관들이 모인 워크숍에서 “각계 원로들의 말씀이 국민들에겐 나라가 온통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 전하면서 “오늘의 윤란스러운 일을 보고 국민들이 아주 당혹스러워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온통 나라가 비리투성이 같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이토록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제3자처럼 말하는 것이 뜻밖이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위원 6명 중 한 명은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2명은 피감기관 관계자와의 접촉설에 휘말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 원장을 비롯, 전현직 10여 명의 임원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다. 거기에 국세청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까지 깊이 연루되어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기업인과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공직자 부패가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중앙부처 국과장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패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5%가 심하다고 응답

했다고 한다. 2009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간 국토해양부와 24개 산하기관에서 금품함유수수 등의 불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225명이나 된다. 인허가와 관리감독권 등 1592가지의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

공정한 사회는 없고 부패공화국만

토해양부이고 보면, 최근 제주도에서 드러난 부정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연 이 나라는 부폐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곳곳이 썩어있다. 저축은행 사건, 제주도 국토해양부 사건, 합동 사건,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정계, 관계, 재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다. 나는 현재의 부폐상황은 효율과 실적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들고 출발한 이 정권의 태생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것이었다. 일견 시의적절한 의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치란 본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국민 내부의 서로 상충하는 권익을 정의와 공동선의 방향으로 조정하는 역할임에 굳이 ‘공정한 사회’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지나친 의욕이 아니었던가 싶다.

부정부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공정한 사회’란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구호로 들리는가. 그 ‘공정한 사회’가 거꾸로 이명박 정권을 포위, 압박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는 어디로 가고, 이제 부

파공화국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야로 정치(31.2%), 법조(14.0%), 언론(12.1%)을 지목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정 저해요인은 지도층의 부도덕(40.7%), 부의 편중과 세습(28.3%), 고용·복지의 불평등(12.2%) 순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이 공정한 사회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도층의 진정성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다. 태생부터 지난날의 부정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이 정부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은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나 아니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척도는 뷔니튀니해도 인사다. 공정한 인사 없는 공정한 사회는 공연불이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이번에 구속된 선거캠프 출신 감사위원의 경우에 서, 또 왜 그가 장관이 되어야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번 개각명단에 끼어있었는데도 절감할 수 있었다. 적어도 이 정부 아래서 공정한 사회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언론인>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지역민의 목소리 대변해 주기를



김병인

아침에 광주일보가 배달되면 가친(家親)이 먼저 보신 후 그 다음에 내가 보게 된다. 가친은 아주 오랜 광주일보의 독자이다.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꼼꼼히 신문을 보신다. 가친의 주요 관심 사항은 지역문제이다.

어려운 지역신문 환경에서 광주일보가 광주·전남의 대표적 신문으로 지역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성장한 것은 바로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해야 할 때다. 최근 반값등록금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광주는 전체 인구의 40%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재학생 2만 명이 넘는 종합대학도 2곳이나 있는 교육도시다. 때문에 지역민 모두가 자연스레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대학 진학률을 기록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 또한, 대학등록금도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교육전문가, 기자들의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놓아去看는 대학 사회의 실제 구성원인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빠져있다. 또 그동안 국가를 대신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사회에 공헌해 온 사

학 재단의 입장반영도 부족하다. 반값등록금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 근본적인 차별을 위해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단편적인 기사에 그치지 말고 계획적인 기획 시리즈 기사가 나왔으면 한다.

6월 3일에는 ‘점심시간 모두가 즐거워요’라는 주제로 무상급식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무상급식 문제는 2009년 이 지역 출신인 김상곤 현 경기도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주민직선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이후 우리 지역도 전면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교육감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면서 전면적인 실시가 예상된다.

그러나 전면적인 무상급식 문제는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국민의 의견도 갈려 있는 것 같다. 당장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 투표가 곧 밸의될 예정이고, 예산 문제도 뒤따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영암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반도 안 되는 20% 수준인 영암군의 전면무상급식 실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암의 실시 상황도 함께 보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심층 기획기사가 많았으면 한다. 지난해 말 다문화기획 기사인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유익했다. 전국최대 규모의 다문화학교인 새날학교가 올해 5월 대안학교로 인정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관계자는 고마움을 전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로 독자와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신문으로 계속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

<서강정보대학 교수·광주일보 독자위원>

고르바초프가 입은 페레스트로이카 웃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

이는 외세에 굽복한 부끄러운 선군정치가 아닌 진정한 남북화해이고 민족동질성 회복이며 국민을 하늘처럼 돌보는 인덕정치·선덕정치일 것이다.

동시에 북은 통미봉남정치도 철폐해야 한다.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는 기치 아래 주체사상을 운운하면서 정작 남한형제에게는 총질하며,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성과 이념성을 떠나 빼아쁜 인간의 단면이다.

또 분단국의 철조망을 악용한 남북한 정치인들도 반성해야 한다. 한민족 건설에서 국민을 구제하고 통합에 희생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 혼란과 대립, 갈등을 야기하는 망국적인 담리당략에 목숨 걸지 말고 남북한이 통합해 해방된 번영의 그날을 위해 나아가자.

<새천년통일한국포럼 상임공동대표·정치학 박사>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다. 국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결핵 실태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환자를 적극히 관리하려는 보건 당국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법정전염병인 만큼 활동성 결핵환자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 조사 등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방위 체계 구축도 급하다. 정부가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김윤남·광주시 남구 방립1동

NGO 칼럼



김영환

한민족 건설을 위한 제언

개국에 의해 분할돼 동서로 분단됐으나 서독과 자유민주국가들의 협력에 의해 통일국가를 선포했다. 그 여파로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붕괴됐고 소련 연방국가들은 물론이고 체코, 평양, 폴란드, 러시아 등 동유럽을 훑어 탈냉전과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이로 인해 동북아 및 아시아의 정세가 역동적으로 변형됐고, 특히 1949년 이래 마르크스 교조주의와 흥미병 모택동주의로 소문난 중화인민공화국인 공산중국 역시 1980년 작은 거인 등소평의 등장에 따라 15억의 대식구가 개혁개방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섰다.

그간 철문을 굳게 잠근 오일달러 이슬람 국가인 종동은 말할 것이 없고 겨우 대륙 아

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권위적인 체제를 유지하다가 봄의 여인 재스민 혁명으로 대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이 중에 침바웨, 이집트,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독재국가들이 서둘러 변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변화의 물결에 부응해 북한도 변해야 한다고 본다. 현대국가에서 절대 왕조 루이 14세와 같이 행세한 나라는 5대 양 6대루에서 북한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00만의 동포가 기아에 허리고 있다. 동포의 비참한 삶을 개선해야 한다. 구소련과 중국도 자국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제2의 혁명을 행했던 것을 살펴야 한다. 스탈린이 즐겨 입던 냉전의 옷을 벗어 던지고 미하일

동시에 북은 통미봉남정치도 철폐해야 한다.

우리는 내의원이나 해민서에 속해온 의원을 도왔으며, 무수히 각 죄수에서 공녀들이 부리던 계집종을 일컫는다. 또 궁 밖에 편지 배달을 하고 답장을 받아 오는 일을 하던 ‘비자’, 공녀들

법정전염병 결핵 예방·퇴치 근본대책 마련해야

종 결핵환자 사망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병이다. 고대 인도 아리아베다교 성전에서는 결핵을 ‘모든 질병의 왕’이라고까지 했다. 이 결핵의 정체는 1882년이 돼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연간 200만 명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결핵 환자가 줄고는 있으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OECD 국가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여야 영수회담, 상생·소통 정치 계기돼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오찬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33개월 만이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여야 영수의 만남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한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이날 회담은 한 번 만나서 풀기엔 과제가 너무 많았고 벅찼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치가 불신과 불통, 불화의 ‘3불(不)’에 빠져 국정 및 민생 현안을 제대로 행기지 못했다는 의미다.

여야는 이번 만남을 대화와 소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 풀지 못한 문제들은 외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중요 현안들이다. 대화를 계속해 시급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국정은 갈등과 대립으로 험비를 거듭하고 있고 민생은 생활환경에 처해 있다. 정치권, 특히 대통령과 손 대표는 통렬한 책임을 느끼야 한다. 큰 틀의 양보와 타협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더 자주 만나 상생과 소통의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광주 미군기지 오염조사 왜 광산구 봇인가

미군기지 캠프 캐럴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기지에 대해 한·미 공동조사단이 나서 고엽제를 포함한 환경오염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당에 자체체를 비용을 들여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심각성을 정부 스스로 부인하는 격이다.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미군 주둔지 관할구역 내에 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광산구는 “국가사무인 국방사업으로 발생한 현안을 자체체에 전가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박하고 있다.

광산구는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1차 조사의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2차 조사는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정밀조사의 경우 어차피 국가가 맡는다.

우리는 광산구의 이같은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경북 칠곡에 있는

방에서 살립을 해주는 ‘각심이’ 등은 비록 그 직급이 낮았더라도 어엿한 직업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조선시대에 여성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민족의 어머니인 대비, 할머니인 대왕대비로 봄계를 따질 수 없는 무품(無品)에 해당된다.

당시 정식 벼슬을 내려받을 수 있는 여성들의 직위는 최상위층인 무품 아래로 내·외명부 18

품계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부분은 남편의 관직에 따라 결정되는 호칭을 부여받는 것이었고, 여성으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밖에 가장 낮은 직급이지만 여성들이 맡을 수 있는 직업은 의녀, 무수리, 비자, 각심이 등도 있었다.

의녀는 내의원이나 해민서에 속해온 의원을 도왔으며, 무수리는 각 죄수에서 공녀들이 부리던 계집종을 일컫는다. 또 궁 밖에 편지 배달을 하고 답장을 받아 오는 일을 하던 ‘비자’, 공녀들

문제는 숫자보다도 내면적인 모습이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체에서 여성 고위직 비율은 조금 과장한다면 조선시대 여성이 차지했던 관직의 형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진정한 우먼파워 실현을 위해서는 남녀평등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깨는 것 이 먼저다.

/박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